다문화가정 초중등학생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 연구

이 준†

요 약

본 연구는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중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적 문제점을 정리한 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정보 인프라 제공 대신 다중 활용 공간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정보 활용 방법으로서 교육환경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이러닝 서비스의 확대,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정보격차, 다문화교육

A Study o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of K-12 Students of Multicultural Background

June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bridging digital divide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background. Specifically, through maximizing equ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greater intervention and comprehensive strategies in the interests of a socially inclusive information society, of benefit to the IT disadvantaged.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I reviewed a variety of policy reports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issue of digital divid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policy change. The major research results were as the following: a policy change in a support of personal computer toward public place rather than individual home, widening use of e-learning service as a tool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the training for teachers and parents to provide an effective education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Keywords : Digital Divide, Multicultural Education

† 정 회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논문접수: 2009년 8월 29일, 심사완료: 2009년 11월 5일
* 본 논문은 2008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KR2008-18)

1.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 이주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간 단일 민족 체제, 순혈주의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왔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함께 사회 운영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 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결혼의 증가 및 이주노동자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가정들이 급속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가정에서 양육되어 공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생들과는 다른 교육적 요구를 지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일선 학교의 고민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숫자는 2005년 5,332명, 2006년 6,795명, 2007년 11,444명, 2008년 15,804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관한 최근에 연구들은 학생들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이 미흡하며, 외모,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학업 및 학교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17].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은 매우 미흡한 형편에 있다. 중앙 정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한국어교육, 방과 후 보충학습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서 학생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적 필요가 복합적이어서 한국어교육 등 특정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정보화가 가장 진보한 국가이므로 정보소양능력에 결손이 발생하면 학업은 물론 졸업 후 사회 진출 시 개인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고 한국어 능력 등 부모의 교육적 지원에 어려움이 상존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내국인 가정 학생들에 비해 정보격차를 보이고 있다[6].

본 연구는 국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범주화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의 하나로 정보화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적 문제점을 정리한 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보격차 실태

여기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 등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거주 실태를 분석한 후, 국제결혼 가정자녀,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정보격차에 관한 현황을 각각 제시하면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적 시사점 논의하였다.

2.1 국제결혼 가정 거주 실태

국내의 외국인 거주자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행정안전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으로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년 대비 23.3% 증가한 숫자이다[20]. 이중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는 640,11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59.6%였다

[20].

국제결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점차 낮아지면서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3년 3,000여건이던 것이, 1995년 1만36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6년에는 3만208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결혼한 한국인 남자 열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을 아내로 맞은 셈이다[14].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에 의한 내국인의 결혼시장 불균형과 한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 여성의 희망이 연계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모두 무직이거나 외국인처가 무직인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제결혼가정의 경제력이 취약하며, 따라서 자녀의 교육에 투입할 경제적 여력 또한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14].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중 상당수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자녀들도 최저 생활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이 57.5%인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국제결혼 가족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은 15%로, 한국의 일반 미취학아동의 보육기관 이용률(57%)에 비해 극히 저조한데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11].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빈곤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261,046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어머니로 둔 한국 국적인 아동들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교육 부문의 신소외계층 양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 정보격차의 주요인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기인한다는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13][21],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설동훈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민자의 경우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남성 이민자는 컴퓨터·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3% 밖에 안되며, 여성 이민자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컴퓨터나 정보화 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나 실제 정보화 교육 경험자는 15%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출신국 별로는 일본과 필리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아서, 25% 정도가 정보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베트남과 조선족 여성을 포함한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10%만이 정보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이민자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정보화 관련 교육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녀의 정보화 관련 교육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2 국제결혼 자녀의 학교 교육 및 정보격차 실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8,778명이다[1]. 이는 2007년 대비 39.6%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이 84.2%, 중학교 11.7%, 고등학교 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7%, 서울12%, 전남 10%, 경남 8.2%, 충남 7.9% 순이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이 90.2%인 16,037명으로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 부모국적별 비율은 일본이 41.0%, 중국 22.3%, 필리핀 14.3% 순이다.

이렇듯 국내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생들 중 상당수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혜영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급 내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데, 따돌림 이유는 외모와 미숙한 한국어가 주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7]. 국제결혼 가정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90%를 차지한다.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자녀들 또한 한국어능력이 부족할 수 있

다[2]. 그렇기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외국인 어머니 모국의 체제와 달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15]. 여기에 피부색 등 외모의 차이로 인한 따돌림이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 중 상당수가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창호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자녀 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대부분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15].

현재 84%에 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사춘기에 접어들고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학교 부적응은 물론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 방법에 관해 연수 및 정보부족 등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

학교 교육의 부진 문제는 정보격차와도 연계되어 있다. 2000년 이후 국가 차원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업 및 과제 수행에 있어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은 필수적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가정 내 교육환경 열약으로 정보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컴퓨터 및 인터넷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컴퓨터 활용능력부족으로 정보화 교육 측면에서의 자녀 지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6]. 조혜영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으로 자녀의 숙제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7].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국제 가정 자녀에 대한 PC 및 통신비 지원으로 정보접근성 측면에서의 격차 해소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교육적 성과로 연계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학부모의 방치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금명자)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학습목적 등 건전한 정보이용 보다는 인터넷 게임 등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

2.3 외국인 노동자 가정 거주 실태

2008년 5월 현재 국재 거주 등록 외국인근로자는 437,727명으로 조선족 50.8%, 동남아시아 28.5%, 중국 7.2%, 남부아시아 5.1%, 몽골 3.3%, 중앙아시아 2.2% 순으로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8.9%(301,556명)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조선족의 경우 여성이 44.6%(99,336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불법체류 외국인이 2007년 11월 현재 22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7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므로 금전적 수혜가 많을 경우 불법 취업이라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불법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체류 후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분상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져 임금체불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로서 신분 및 주거지역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공교육 기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혜영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자녀 가운데 약 8,000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불법취업자 부모와 함께 공장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18]. 따라서 이러한 거주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녀 교육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당연히 정보격차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2.4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학교 교육 및 정보 격차 실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국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402명으로 2007년 대비 15.9%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70.0%, 중학생이 22.4%, 고등학생이 7.6%이고, 지역별 비율은 서울 38.2%, 경기 30.6%, 전북 8.0%, 경남 7.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국적별 비율은 몽골 26.2%, 일본 22.0%, 중국 20.3% 등이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16].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국내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 출국 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안감으로 인해 자녀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9].

이창호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 형편에 따라 특별학급 혹은 일반학급에 편성된다[15].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자녀를 위해 특별학급이 설치된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특별반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규 학급에서 특별한 지도 없이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를 따라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본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해 연령에 맞는 학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조혜영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한국어도 늘고 학습능력도 다소 향상되지만 학급 내 한국 학생들에 비하여 성적이 낮고 전반적으로 학습부진의 문제가 있어서 이로 인해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7].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부모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들 보다 더욱 심각한 교육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업의 문제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자녀는 정보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또래의 한국인 아동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에 능숙한 반면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용 능력도 떨어지는 편이다[4]. 일부 이주노동자 가정 중에서 가정 내 PC 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소식을 접하고 자국민간 정보소통의 공간으로 주로 활용한다[6].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학습 과정에서 약 16% 만이 TV나 비디오 오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습 목적의 ICT활용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82명의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실태를 조사한 김정원의 연구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자녀 중 EBS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8%,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및 기타 사설 인터넷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9%에 그치고 있다[7]. 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이 정보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함께 온라인 학습자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수년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주요 성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추진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 목적으로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에 중앙다문화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교재 개발을 위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및 유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학교 운영, 교사 연수 및 지역 단위의 정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3].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교육 사업에서 정보화 부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하다. 우선 다문화교육정책의 사업계획서에 정보화 부문은 빠져 있다. 정보화 부서인 이러닝지원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추진 중이긴 하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총체적인 시각

을 반영하는 총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병행하여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사이버가정학습 수강생 선정 시 배려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타 정보화 관련 추진 실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의 온라인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타 정부 부처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보화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PC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여성의 정보화교육 실시하여 학부모 정보화 지원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정보화 겨울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정보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PC 지원, 정보활용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대상의 정보화 백일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2008년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300 가정을 선정해 중고 컴퓨터를 지급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어세계화재단(http://glokorean.org)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처 간 정책적 공조 및 협의체 운영 등 세부적인 수준에서의 업무 협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PC 지원, 사이버가정학습이 대표적이며, 기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은 꿈을 찾는 청소년 IT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PC 무상지원 및 IT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별개로 서울시도 '서울 IT 교육 봉사단'을 구성하여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중고 PC 및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부 정책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종합지원 계획은 정보화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에는 잠재인력정책과, 이러닝지원과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고 관련 업무의 연계를 통해 성과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은 PC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지원 중심으로 교육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보다 다양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 부문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4.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생소한 사회문화적 환경, 가정의 열악한 경제 여건, 학습부진, 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언어구사능력이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격차는 다시 교육격차 및 향후 사회 진출 시 소득격차, 문화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정보 접근성, 정보활용 방법, 정보격차 해소

교육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1 정보 인프라 지원 방법의 개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이 원활해야 한다. 그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왔지만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정책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예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PC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보 인프라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을 줄이고 대신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의 지원 비율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가계 소득이 낮고 부모가 밤늦도록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컴퓨터 활용이 교육 목적이 아닌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 등으로 과도한 컴퓨터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여러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생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막연히 공공기관에 인터넷 연결된 PC를 제공하는 공공 PC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소양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버가정학습, EBS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전문 인력에 의해 설정된 목적에만 부합하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시설, 대안학교 등에 컴퓨터교육 전문가와 PC를 함께 지원하는 방법이 예가 될 수 있다. 컴퓨터교육을 전공한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이수 학점의 일부를 이들 기관에서의 봉사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인프라 제공을 위해서는 PC 확보가 관건이다. 가장 널리 활용 될 수 있는 정보화기기이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이다. 그간 시도교육청의 PC 지원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일괄 구매를 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괄 구매를 통해 지원용 PC대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민간부문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이 역시도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PC 교체주기가 빠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PC를 정비하여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정들을 돕는 교육기관으로서 정보화시설이 열악한 곳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히, 교체 주기가 3년 혹은 그 이하인 기업이나 각종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및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상당한 수량의 PC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드림업 PC' 사업은 교체시기가 된 전경련 관련 기업체의 PC를 기증 받아 수리 후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연간 2,500대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8]. IT 환경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있는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 필요한 적정 PC 수량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학부모 정보화교육의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보화 교육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 대한 교육이 함께 필요함에도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고 단편적이다[20]. 개별 학생 가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컴퓨터를 정보격차해소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활용할 여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부모가 자녀의 컴퓨터 활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활용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소양능력을 파악하고 미흡한 경우 사전 교육을 전제로 컴퓨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컴퓨터 활용의 유익, 과도한 컴퓨터 활용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을 다문화 가정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고 학교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학교 준비물 등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컴퓨터 활용 유익과 문제점에 대한 교육,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부모 이용 교육 등 정보화를 통해 자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과 한국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준비된다면 가정 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안내서를 한국어와 학부모의 모국어로 함께 제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의 정보화교육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가정 여성에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정보소양교육이 현재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 소양교육에서 익힌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교 교육과 연관된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평생교육원, 학교, 교육청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중앙 정부의 부처간 업무 담당자 협의체와 지역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공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다문화 2세의 미취학률은 24.5%에 이르기 때문에[20],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모교육은 자녀의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맥락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4.3 이러닝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현황 분석에서 언급되었듯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습 부진 및 학습 결손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 현장은 이들이 아니어도 이미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준별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지적인 성과만이 보고될 뿐 전국적으로 내실 있는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는 이러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닝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 자체가 정보격차를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환경이 된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한국학생들과 생활하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별도의 적응학급을 운영하고 적응정도를 판별하여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거나, 방과후학교, 주말반 등을 이용하여 보충학습기회의 제공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내실 있는 수준별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 교육가 교수-학습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방과후학교 등과 병행하여 이러닝을 통해 학생의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과교육에 앞서 교육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보다 심층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러닝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교과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규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학교가 지니는 교과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대안학교 및 중도 탈락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http://www.cyber.hs.kr/)는 2008년 현재 총 14,255명에 이르는 재학생이 있으며 설립 취지 자

체가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러닝의 발달로 사이버교육과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력인정 혹은 교과교육 보완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사이버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4 초중등 교원의 정보격차해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교육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초·중등교사의 정보격차해소 역량은 미흡한 형편이다. 기본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것이기 때문에 현직 교원들 대다수가 교원양성과정에서 다문화교육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가 정보격차해소 교육내용이나 방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이제 초기 단계로서 보급, 확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교사 모두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이 입학 혹은 전학 올 경우 비로소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15], 체계적인 교육 방안 마련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 오프라인 집체식 연수 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보격차해소교육 방법에 관한 원격형태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직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단순히 교육방법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는 교사간 정보공유, 다문화교육 지도교재, 연구시범학교 교사 및 학생 인터뷰, 사례별 대처 방안 중요 전국 사례 모음, 각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홈페이지 연계 등을 포함하는 교사대상의 종합적인 원격교육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정 시도가 아닌 전국을 포괄하는 공교육 지원 성격이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에듀넷에 이러한 원격연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안고 있는 교육적 문제는 경제적 빈곤에 따른 가정의 교육환경 열악, 부모 및 학생 본인의 낮은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사회 및 한국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제시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이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타 교육적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부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들이 열린 마음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2050년이 되면 국내 거주 전체 인구의 약 9%가 외국인이 될 것으로 추정한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변화를 사회 갈등이 아닌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특히, 정보화를 기초로한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사회구성원간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류로 고착화되지 않고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주체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정보격차는 정보접근과 활용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직업 선택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문의 정보화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해 학업은 물론 사회 진출 시 필요한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정보 인프라 제공 대신 다중 활용 공간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정보 활용 방법으로서 교육환경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이버가정학습 등 공교육 이러닝체제의 강화,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들이 각기 추진되기 보다는 정보격차 이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안고 있는 교육적 문제점들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1]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도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 교육과학기술부(2006).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료.

[3] 교육과학기술부(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복지정책과 정책자료.

[4]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5]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연구 :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보고서.

[6] 김영임(2006).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습 및 정보화 지원 방안에 관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세미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자료 RM 2006-11.

[7] 김정원, 이혜영, 배은주, 허창수(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5-5.

[8] 디지털타임스(2008). 전경련 드림업PC 2500대 지원. 2008년 12월 17일자 기사.

[9] 박성혁, 성상환, 곽한영, 김명정, 홍은실, 송성민, 황혜원, 우희숙(2007).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10] 법무부(2007).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 법무부 보도자료 2007년 12월 13일.

[11]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12]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06-55.

[13] 양심영, 황진구 (2002).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 한국청소년연구, 13(1), 299-341.

[14] 이삼식, 박종서, 김필숙, 김형석(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출산 형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9-1.

[15] 이창호, 오성배, 정의철, 최승희(2007).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7-R09.

[16]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17]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조혜영(2008). 한국 내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실태 -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19]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정보격차·정보문화 백서.

[20] 행정안전부(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정책자료.

[21] Fairlie, R. W., London, R. A., Rosner, R., & Pastor, M.(2006). *Crossing the divide: Immigrant Youth and Digital Disparity in California*, Center for Justice, Tolerance, and Communit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이 준

1988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1991 미국 Florida State Univ.
교육공학과 (M.S)
2000 미국 Utah State Univ.
교육공학과 (Ph.D)
2000~20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2004~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교육정보화 정책, e-Learning
E-Mail: junelee@hufs.ac.kr